



KOCHI자료 12-008
2012.12

시진핑 시대의 개막(2)

- 경제 · 국제관계 -

시진핑 시대의 개막(2)

- 경제 · 국제관계 -

작성

중국사업단 **박한진** 부장

시진핑 시대의 개막(2)

－ 경제 · 국제관계 －

I. Scenario : 경제정책 방향성 예측	3
II. Prescription : 제18차 당 대회 이후의 경제현안	6
III. Opportunities : 미래 10년 성장산업 전망	11
IV. Relations : 시진핑 시대의 국제관계	13

I. Scenario : 경제정책 방향성 예측

1. 배경

□ 2008년과 2012년의 상황 차이

- 2011년 하반기부터 위축되기 시작한 중국경제는 2012년 3분기까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아 자칫 장기침체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
 - 생산 · 투자 · 소비 증가율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섬
 - 과거 20~30%를 넘어섰던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리수로 떨어졌고 수입의 경우 지속 확대해 내수 진작의 지렛대로 삼겠다면 정부 발표와 달리 월별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함
 - 9월 실적이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시장 불안정과 중국 내수부족으로 추세적으로 낙관적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

-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영향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8년과 위기의 영향이 장기화된 2012년의 중국 경제상황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
 - 2008년 글로벌 위기 발발 시기에는 성장률 유지(바오파 保八)가 최우선 정책 과제였음
 - 당시 중국은 11.5규획(2006~2010) 목표 달성을 위해 최단기간 내 V자형 회복에 주력했고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 4조 위안 규모의 대형 재정투자를 통해 2009년 9.2%로 떨어졌던 성장률을 2012년 10.4%로 끌어올리는데 성공
 - 그러나 경제의 구조적인 불균형 치유를 위한 개혁작업이 사실상 중단됐고, 공급 과잉심화와 함께 2010~2011년 물가가 위험수준으로 급등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됨
 - 2012년 현재는 무조건적 고성장보다는 균형적 조정과 안정적 성장이 핵심과제로 등장
 - 단기과제는 수출 및 내수부진에 따른 기업 재고의 효율적 처리, 산업현장에 대한 선별적 자금공급, 12.5 규획 과제 추진 등

- 장기과제는 글로벌 위기 대응과정에서 비대해진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을 육성하는 이른바 ‘민진국퇴(民進國退)’형 정책을 구사하고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것임
- 2008년의 경우, 개혁 일정을 중단한 채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적 경기부양 정책을 펼 것이라면 2012년은 체질 개선이 보다 우선순위에 있음

○ 중국경제는 2013년 1분기부터 점차 성장국면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

- 우선 제한적이거나 확장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유동성 공급이 시장의 기대수준을 계속 상회한 점을 꼽을 수 있고 각 지방정부의 인프라건설 프로젝트가 속속 발표되면서 지방 경제가 활기를 보이기 시작
- 이런 움직임들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되어 2013년 1분기 경 점진적 회복세진입 전망
- 다만 세계 및 중국 경제에 추가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음

2. 경제정책 3대 시나리오

4

□ 시나리오 유형

- 향후 수년 간 중국이 구사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3가지 시나리오로 요약됨
 - (시나리오 1): 고성장을 위해 2008년 ‘4조 위안’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자 단행
 - (시나리오 2): 성장급락을 감수하며 강력한 부동산·산업 구조조정 추진
 - (시나리오 3): 충격완화 속 구조조정을 위해 제한된 범위의 경기부양 및 미세조정

□ 시나리오 타당성 판단

- 2013년은 물론 제18차 당 대회 이후 수년 간 시나리오 3의 가능성이 단연 높음

- 시나리오 1의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누적, 유동성 과잉, 부동산 버블재연, 공급과잉 · 저효율 제조업 구조조정 실패(失機)에 따른 위기 발생 및 불균형 심화 등이 우려
 -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정책은 효과보다 부작용 우려가 크며 대규모 확장형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증세, 국채발행, 유동성 확대 등의 조치가 불가피함
 - 증세는 실물경제 비용상승을 수반하며, 채권발행은 대형프로젝트 추가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, 정부의 현재 정책기조와 맞지 않음
 - 또한 유동성 확대는 일시적인 경기진작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자산가격 급등 우려가 매우 큼
- 시나리오 2의 경우 통화공급의 급속한 위축, 물가의 지속하락,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,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중국경제는 단시간 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우려도 배제할 수 없음
- 결국 시나리오 3의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정책운용 상의 어려움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음
 - 중국은 성장이나 분배냐의 이른바 ‘두 마리 토끼’가 아닌 안정적 성장유지, 구조조정, 물가억제 등 ‘세 마리 토끼’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으로 충격적이고 물량위주 정책을 구사하기 어려움
 - 제한된 범위의 경기부양과 정책 미세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는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 정부와 경제실체들의 장기간 인내를 요구함

II. Prescription : 제18차 당 대회 이후 경제현안

1. 12·5 기획 목표달성 총력

□ 量에서 質로의 전환

- 중국은 11·5 기획(2006~2010)의 정량목표(성장률, 국민소득, 도시화율 등)는 대체로 달성했으나 낙후산업 구조조정, 균형발전, 소비확대 등 질적 과제 추진 성과는 미미
 -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전환, 소득분배 개선, 산업구조 고도화, 녹색환경건설, 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12·5 기획의 역점추진과제
- 중국은 이를 위해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하는 전략을 채택
 -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國富의 재분배 노력 전개
 - 양호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고성장 기조 유지
 - 취업률 제고, 주민 소득 증대, 사회보장제도 완비 추진

6

□ 12·5 기획의 주요 목표과제

- 거시경제
 - 12.5 기획 기간 중 경제성장률 목표치 7% 제시(11.5 목표치 7.5%보다 낮은 수준)로 질적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정책기조 반영
 - * GDP 목표 : 39조 8000억 위안('10) → 약 55조 위안('15)
- 산업구조조정 및 내수촉진
 - 첨단기술 연구개발, 낙후산업 구조조정 등 제조업 선진화 추진
 - * R&D 경비의 GDP 비중을 1.8%(2010)에서 2.2%(2015)로 제고
 - * 비철금속, 석유화학 등 낙후산업 구조조정 지속
 - 비철금속: 알루미늄, 아연 등 10종 생산량 4,100만 톤 내 통제
 - 석유화학: 100대 기업이 전체 산업의 2/3 점유토록 대형화

– 내수 촉진을 위해 서비스업 비중 확대 및 도시화율 제고

* 서비스업 GDP 비중: 43%('10) → 47%('15)

* 도시화율 : 47.5%('10) → 51.5%('15)

○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

– 에너지 절약을 통한 효율적 자원이용과 환경보호노력 강화

* 에너지 효율기준, 환경요건을 강화한 산업진입정책 마련

* 신항전력산업 육성으로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

• 2015년까지 단위 GDP 당 에너지 소모량 16%, 오염물 배출총량 8~10% 감축

○ 민생 안정

–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주민소득 증대 목표

*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을 13% 이상으로 유지

* 양로보험 수혜자수 1억 명 확대, 사회보험법 등 추진

2. 18차 당 대회 이후 예상 개혁조치

○ 금리자유화 점진 추진

– 현 금리체계는 기본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어 과도한 대출 수요를 유발하며 과도한 투자를 조장하는 부작용 발생

– 대출 수혜자가 주로 국유기업에 집중돼 다수 중소기업이 지하금융에 의존

2012년 6월 8일부 기준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나온 금리우대 및 할인정책에는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단기처방과 함께 금리자유화의 추진이라는 중장기적 고려가 작용함. 1년예금금리를 3.25%로 인하하며 우대금리 상한폭을 10%로 유지했고 1년 대출금리(6.31%)는 할인허용폭을 10%에서 20%로 확대함. 중소기업 대출수요확대, 예대마진 축소를 통한 은행간 경쟁유도 차원의 조치로, 금리자유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음.

– 금융당국은 점진적 금리자유화를 위한 실질적 장애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18차 당 대회 이후 지속 추진될 가능성이 큼

○ 감세

- 포브스에 따르면 중국의 세 부담 고통지수는 세계 2위이며 정부 재정수입의 GDP 내 비중이 1978년 31%에서 1990년대 중반 10%수준으로 내렸으나 최근 다시 20%로 급등
- 고소득층에 대한 차등 고세율 적용 및 부동산보유세제(物業稅) 개선조치 등이 예상

○ 상속세·증여세 징수

- 빈부격차 심화 및 기업인의 대물림 경영확산 추세로 부의 편중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수년 전부터 논의돼 온 상속세 및 증여세 점진도입 가능성 예상

○ 중앙국유기업 독점구조 완화

- 중국은 2008년 반독점법 시행후에도 중앙국유기업의 독점적 구조가 여전한 상황으로, 국유 독점업종에 대한 민영기업 참여확대 조치가 가속화할 전망

○ 국유기업 개혁

- 주룽지(朱鎔基) 前총리시기 이후 추진돼온 국유기업 개혁조치로 주식제, 상장 등이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적자 국유기업이 흑자기업으로 전환
- 그러나 국유기업의 이윤은 경영활동에 의하기 보다는 토지불하, 우선적 대출, 과다 보조금 등 특혜에 따른 경우가 많아 국유기업 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진적 개혁조치 예상

○ 민간 해외투자 장려

- 장기 버블화 상태인 중국의 부동산 가격 및 증시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결과
- 대량의 자금에 대한 출구확보 및 과도한 외환보유고 관리 차원에서 민간의 해외 투자 활성화 장려조치가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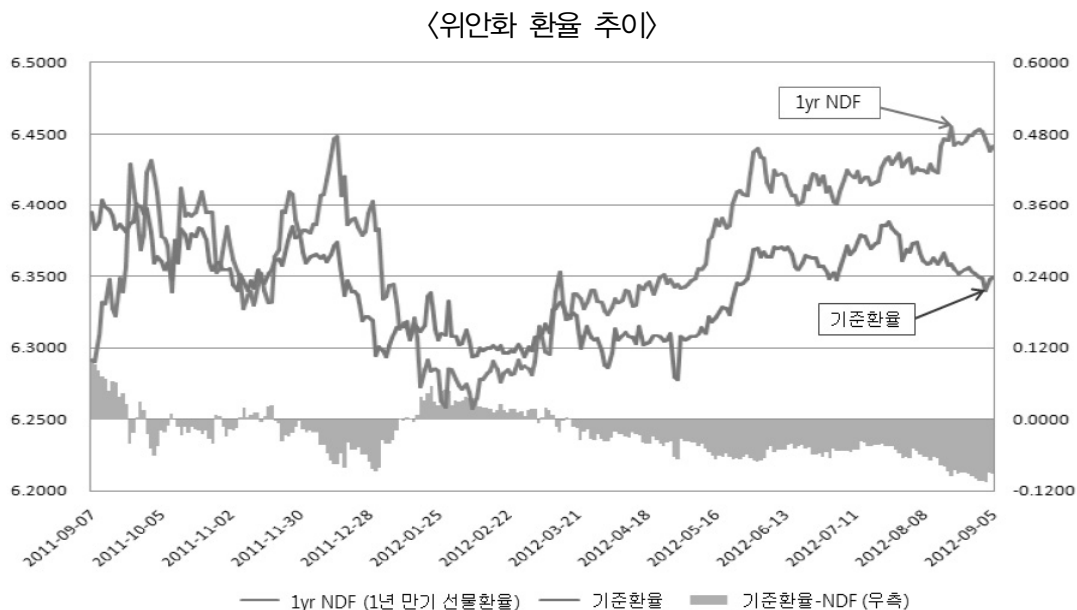
○ 정부기구 개편

- 중첩기능 통폐합 및 국내외 상황변화 대응 차원에서 2013년 3월 예정된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정부기구 개편이 단행될 전망

- 일부 소식통들은 경제발전 방식전환을 뒷받침하고 비대한 조직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편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

○ 위안화 환율제도 개선과 국제화 점진추진

- 2012년 10월 현재 위안화 환율은 단기 평가절상(현물환율), 장기 평가절하(NDF) 추세를 강하게 보이고 있음
- 중국은 향후 일정기간 환율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어 환율수준 자체보다는 제도적 측면의 개선조치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
- 위안화 국제화는 당분간 역외 유동성 증가를 통한 역외시장 기반확충, 아시아 지역 무역결제 비율확대 등의 조치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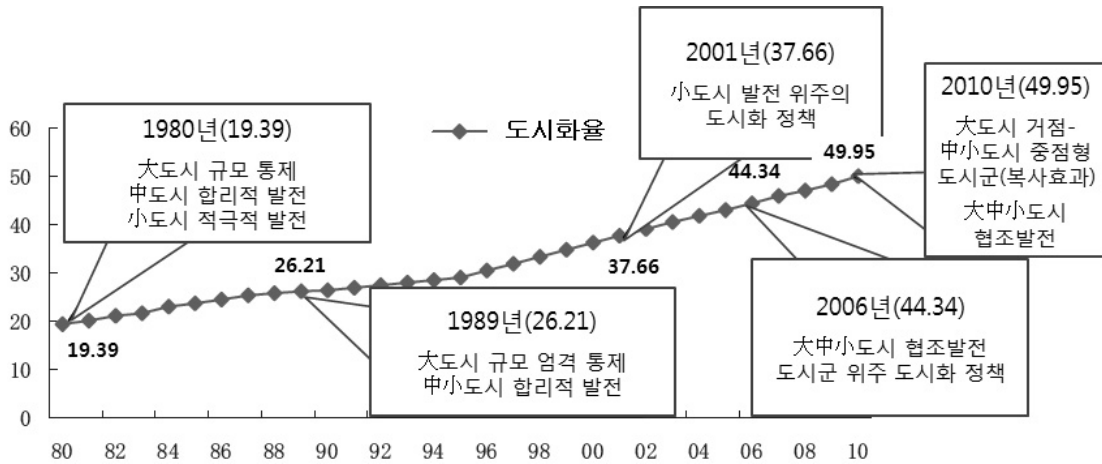
자료 : WND, 宏源證券

○ 도시화

- 2012년 1~3분기 순수출의 GDP 기여도가 -5.5%를 기록하고 구미지역 선진국 시장 수요회복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비확대와 구조조정을 위해 광역 도시권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
-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50% 수준(대도시)인데 향후 20년간 이른바 기러기 편대형(경제발전 도시가 인근 저발전도시를 이끌고 나가는 구조) 광역 도시권화를 집중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
- 특히 주목받는 지역은 충칭(약칭 渝)과 쓰촨성 청두(약칭 成) 주변지역을 통합한 청위(成渝)권, 광둥성 주장(珠江)삼각주, 상하이-저장(浙江)-장쑤(江蘇)의 창장(長江)삼각주, 푸젠(福建)성의 해협서안(海峽西岸)권 등임

〈중국의 도시화 정책 변화과정〉



자료 : CEIC,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

○ 환경보호법규 정비

- 맹목적 GDP 성장을 포기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적·법적 장치미비로 효과가 미약해 환경보호 관련법규를 대폭 정비할 가능성

III. Opportunities : 미래 10년 성장산업 전망

1. 집중개혁 산업

○ 의약

- 중국은 낙후한 의약산업 개혁·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 3월 국무원이 의약산업 12·5규획을 발표
- 18차 당 대회이후 의약유통부문, 공립병원, 의료보험제도 등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조치 예상
- 의약부문 개혁조치 진전에 따라 국민 의료비부담이 경감되면 내수소비 촉진효과가 예상되나 당분간 외자기업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

○ 농업

- 중국은 식량증산 및 농가소득 확대를 위해 종묘, 사료, 양돈부문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- 중국의 농업부문 개혁추진은 종묘, 사료 등 부문에서 한·중 간 새로운 협력가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

○ 에너지가격

-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저렴한 에너지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가격관리체계를 집중 개혁할 전망

○ 금융

- 점진적 금리자유화 추진과 함께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이 예정돼 있음
- 상업은행 업무범위에서 중소기업고객을 확대하고 금융업 선진화를 위해 외국은행과의 협력강화 추진

○ 문화미디어

- 문화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며 정부의 관리기능은 줄이되 국유기업의 역할은 확대 추진

- 중국적 문화 콘텐츠의 비즈니스 모델연결을 통해 세계시장 진출확대 모색
- 자국 산업 집중육성방침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은 당분간 상존할 전망

2. 업그레이드 산업

○ 에너지안전

- 미래 안정적 에너지확보를 위해 석유,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를 지속적으로 축소
- 해외 메이저급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셰일가스 등 근·심해 에너지자원 집중 개발

○ 환경보호·에너지절약

- 오수처리·탈황설비를 집중 보급하고 대기오염·중금속 처리시설을 대폭확대

○ 장비제조

- 첨단·혁신·친환경형 각종 중대형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
- 해양엔지니어링, 항공우주기술, 신소재, 지능형장비 집중 개발

IV. Relations : 시진핑 시대의 국제관계

1. 對美 관계

- 마찰 회피하며 양국 간 및 국제 현안 협의하는 정책기조 유지
 - 중국은 권력 교체기에 발생하는 계파 간의 마찰을 봉합할 시간이 필요하고, 처리해야 할 국내 경제사회 문제가 산적해 대미 관계가 조용히 진행되기를 희망
 - 2013년 이후 중 · 미 관계는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오바마가 재선됐고 중국도 정책의 연속성이 예상돼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전망
- 민주 · 공화 양당의 대중국 정책은 차이가 많은 편임
 - 민주당은 안보는 동맹, 경제는 경쟁이라는 입장이고, 공화당은 안보와 경제 모두 강경하고 부정적임
 -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중국을 미국의 대화 파트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, 공화당은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함
 - 대외정책 슬로건에서는 민주당이 미국 일방주의를 지양하는 "더 강한 미국"인 반면 공화당은 "미국 제일주의"를 내걸고 있음.
 - 오바마의 재선으로 양국 관계가 상대적으로 다소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지만 양국이 2013년 초부터 대립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음
- 양국 관계를 부문별로 전망해보면, 통상문제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큼
 - 글로벌 금융위기의 장기화로 양국 모두 국내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통상문제에 관한한 자국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조가 형성될 것이며 때에 따라 한 치 양보 없는 긴장 국면도 배제할 수 없음
 - 양국의 통상마찰은 과거에 주로 반덤핑을 주고받던 수준을 넘어 상계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모든 무역구제조치를 조합하는 단계로 진입한 상황
 - 또한 무역불균형에 관해서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불안요소임

- 2012년 하반기 미국의 대선정국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위안화 환율문제는 2013년 초부터 핫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큼
 - 최근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평가절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중국은 2013년부터 절상 속도를 줄여갈 방침인 것으로 보여 갈등 소지로 작용할 것임
- 미국이 추진 중인 TPP(Trans-Pacific Partnership ;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)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는 역내 통상주도권 경쟁차원에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
 - 이 경우, 역내 국가들은 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에 치중할 것이며 한국도 이른바 '연미화중(聯美和中)'의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
 - 다만 중·미 양국은 정치, 경제 각 분야별로 고위급 채널을 60여 개 가동하고 있어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
-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은 사안별로 협력과 공방의 국면을 번갈아 보일 전망
 - 예를 들어 셰일 가스의 경우, 중국은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자국 내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며 미국 역시 이 과정에서 엑손모빌 등 자국 에너지 회사들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음

2. 對한반도 정책

- 시진핑 집권 후에도 남북한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자세를 보이며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
- 한국에 대해서는 신정부와의 관계 강화에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, 협상이 진행 중인 한·중 FTA에 좀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해올 수 있음
 - 시진핑은 과거 1990년대 푸젠성 당서기 시절에 경제사절단을 인솔해 방한한 경험이 있고, 한국과의 경협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·중 경제교류는 기본적으로 양호한 국면을 보일 전망

- 한국은 수교 20년간의 성과와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, 향후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
 -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격상돼 왔지만 정치안보와 경제관계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 발전 상황에 놓여 있고 핵심 또는 긴급현안을 다룰 협의의 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향후 전략대화의 채널을 보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
- 대북한 관계는 경제 분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
- 황금평과 위화도, 나선지구가 이미 양측 간 실질적인 개발단계에 들어섰음
 - 이들 지역은 중국으로서는 동북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지렛대이며, 북한의 대외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역내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임
 - 북한의 개발 또는 대외 개방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유리하며, 이 지역에 한국기업이 진출할 경우, 한 · 중 FTA 상의 역외가공지역 인정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남북한과 중국 모두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임./끝/

－ 시진핑시대의 개막(2) 경제 · 국제관계－

－ KOCHI자료 12-008 －

발행인 : 오 영 호

발행처 : KOTRA

편집인 : 배 창 현

발행일 : 2012년 12월

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(우 137-749)

전 화 : 02)3460-7114(대표)

홈페이지 : www.kotra.or.kr

Copyright ©2012 by kotra. All rights reserved.

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.

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
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.